

제418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9월11일(수)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4. 현안질의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
2. 2024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2
4. 현안질의 3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위해 필요한 안건들을 의결하고 현안질의
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21분)

○위원장 김석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
니다.

국정감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 감사는 10월 7일 외교부와 재외동포청
그리고 각각의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해서 10월 8일에 통일부와 민주평화통
일자문회의사무처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10월 24일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
니다.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미주반·구주반·아주반 등 3개 감사반을 편성, 총 23개 공관에 대
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안내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국정감사계획서상 미주반으로 되어 있는 김준형 위원님께서 구주반으로 이동 편성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변경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을 포함하여 국정감사계획서상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내용과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22분)

○위원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정감사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게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9월 11일까지 의정자료유통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총 4084건입니다.

어제까지 접수된 서류제출 요구서는 오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관계부처에 발부할 예정이며 추후 접수되는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기존 관행대로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추가로 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국정감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0시24분)

○위원장 김석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증인은 국정감사 대상 기관의 기관증인과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신청하신 일반증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관증인의 경우 기관장과 관계부서장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관계부서장은 중앙행정기관은 국장급 이상, 재외공관은 공사참사관급 이상, 산하기관은 임원급 부서장을 말합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일반증인은 지금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증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안질의

(10시25분)

○위원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오늘 현안질의를 위해서 조태열 외교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장원삼 국제협력단 이사장은 중앙아시아 3개국 국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
출하였고 오늘 김동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가 회의에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현안질의는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
서 간사 간 협의로 7분으로 하며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강 위원 외교부장관님,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강 위원 지난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 분이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을 증언해 주실 분이 이제 여덟 분밖에 안 계신다는 뜻입니다.

장관님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정부 차원에서 2015년 합의로 일단락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
니다.

○이재강 위원 지난해 우리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고 가해사실을 인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2015년 합의가 유효하다라는 기존 정부의 입장에 따라 합의에 기
초해서 돌아가신 분을 포함해서 살아 계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또 인권적인 측면에서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강 위원 한번 들어 보시지요.

많은 국민들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동참하고
전 세계 각지에 세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이재강 위원 장관, 현재 평화의 소녀상이 해외 지역에 몇 개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
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숫자에 좀 약합니다.

○이재강 위원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외교부 답변 자료에 의한 겁니다.

현재 해외에 소녀상은 총 18개이고 미국, 중국, 독일, 호주, 이탈리아, 대만, 필리핀 등 주요 도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마닐라에 세웠던 소녀상은 4개월 만에 없어졌고 독일 카셀대 안에 설치한 것도 1년이 안 돼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개별 건에 대해서 다 사항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재강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 세계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위해 전방위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대해 막을 수 없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말하던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조차도 철거했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전체 ODA의 상당 금액, 39% 이상을 일본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베를린 소녀상이 철거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듣고 있습니다.

○이재강 위원 베를린 평화 소녀상 철거를 막기 위해 민주당 대표단으로 제가 직접 4월 4일부터 9일까지 독일과 프랑크푸르트를 다녀왔습니다.

2022년 일본 기시다 총리가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소녀상 설치에 대해 유감을 언급했고 이후 일본 정부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에 대한 전방위적 압력과 로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번에 가서 들었는데 일본 총영사가 카셀대 모 지역에 그 현장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읍소를 했답니다,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정부는 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소녀상, 특히 해외 소녀상 문제는 민간 주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국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기본 입장을……

○이재강 위원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자, PPT 한번 더 보십시오.

소녀상 건립 주체가 모두 민간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현지 한인회나 개인이 세운 곳도 있지만 대부분이 평화의 소녀상 건립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이 건립에 함께했습니다. 해외 설립 시에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과 논의를 거쳐야 하는 일이고 제막식에는 지역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런 사항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대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강 위원 그래서 민간이 주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할할 소관이 아니라는 말은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소녀상 건립은……

○외교부장관 조태열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관할 할 일이 아니고 권장할 것도 아니고 그것을 방해할 일도 아니고 민간 주도에 맡겨라라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이재강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소녀상 문제로 지금 일본이 전방위적으로……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계속 원인과 저희들

의 그런 우려사항을 일본 정부 측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강 위원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일본 정부가 뒤에서 움직인다라는 게 확인되기가 쉽지 않은 사항들입니다.

○이재강 위원 그러면 총영사가 그 현장에 가서 이 소녀상을……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은 누구에게 들으신 말씀이신가요?

○이재강 위원 그 현지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는 그 얘기 듣지 못했습니다.

○이재강 위원 소녀상 건립은 지자체가 건립 주체이고 설립을 위해서는 해외 현지에서 부지를 관할하는 정부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외교부나 현지 대사관에서 왜 철거를 해야 하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일본의 압력으로 철거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필요한 조치는 했습니다. 소통도 했고요.

○이재강 위원 베를린에 가 보니까 필요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관심 밖의 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신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재강 위원 정부가 못 하니까 국회의원이 제가 직접 베를린시와 또 독일 연방회의, 미테구를 방문하고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는 왜 과거사 대응에 소홀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강 위원 소홀합니다.

2025년 예산 정부 제출안을 보면 일제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대응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2023년 14억 2600만 원에서 2024년 8억 1200만 원, 2025년에는 7억 6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과거사 대응을 이제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산 액수 가지고 과거사 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을 판단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강 위원 무리가 아닙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전 세계 인류의 보편적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 국민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외교부의 역할입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위안부 문제 등은 인권 문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강 위원 외교부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기 이재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요한 위원 장관님, 외교부장관님께서 최근에 일본하고 고별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외교부장관 조태열** 기시다 총리께서 퇴임 전에 방한을 해서 윤 대통령님과 그동안에 이루어 놓은 한일관계 성과, 사업들을 둘러보고 앞으로 계속 확대 심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의논을 하고 퇴임을 하고 싶다는 희망을 표시해 오셨고 그것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셔서 회담을 가졌는데요. 저는 새로운 어떤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 가는 데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기시다 총리 퇴임 이후에도 일본 정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요한 위원** 소녀상 말씀도 나왔고 일본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개탄스럽게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보다 더 근본적인 야스쿠니에 있는 정치범 14명의 유해가 남아 있는데 예를 들자면 다른 나라하고 연대를 해서 그 유해는 거기에서 없애면 참배해도 좋다. 조금 더 진척된 장기적인 한일관계에서 우리한테,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기 참배하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솔직히. 그런 외교적인 생각은 혹시 장관님께서 해 보셨는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역대 정부에서 다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여러 가지 해결 방안도 제시하고 했습니다만 일본의 입장이 그 부분에서는 강경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이어져 오고 있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할 때마다 그리고 공물을 봉납하든가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필요한 성명도 내고 항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요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14명의 전범만 치워 준다면……

○**외교부장관 조태열** 분사하는 문제 그런 것도 다 그동안에 제기가 됐고 해결 방안의 하나로 저희들이 제시해 오고 그랬지만 일본과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요한 위원** 아마 중국도 환영할 거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일본……

○**외교부장관 조태열** 물론이지요.

○**인요한 위원**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하고 같이 이런 작업을 한다면, 우리도 그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참배하는 것은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이 근본적인 해법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요한 위원** 통일부장관님,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풍선을…… 제가 이과를 했기 때문에, 헬륨 풍선을 보내면 터지지 않…… 대개 뭐랄까요, 휘발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북쪽에서 온 풍선은 지금 수소 풍선, 하이드로젠(hydrogen) 풍선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기폭장치를 폭탄처럼 만들어서 보낸 건지, 아니면 휘발성이 있어서 그 풍선이 부딪혀서 불이 난 건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 문제는 지금 합참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합참과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인 협조를 하지 못했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합참으로부터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면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요한 위원** 겨울 전에 식량 사정이 신의주와 자강도가 굉장히 안 좋을 텐데 우리가

직접 지원을, 저는 대북 인도적인 지원을 많이 경험한 사람으로서 또 이용선 위원도 전에 같이 협력도 많이 했는데 겨울 전에 우리가 북쪽에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많은 천막촌들이 생겼다는데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적극적인 간접 지원이라도, 늘 내가 물어보는 질문이지만 또 혹시 새롭게 지금 좀 창조적으로 북쪽을…… 왜냐하면 헌법상 정부는, 우리가 북한 정부는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많지요, 싫어하고. 그렇지만 국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북한 국민들에 대해서는 좀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민주당이나 우리 당분들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혹시 새로운 계획이 있는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정부는 대한적십자를 통해 가지고 북한 수해 지원에 대한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민간단체 열 곳에 대해서 북한과 수해 지원과 관련된 접촉 승인을 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아직까지 반응이 없지만 정부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또 북한의 호응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간, 정부뿐만이 아니고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우리가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24년만 하더라도 정부가 민생협력지원으로 협력기금에 4700억 정도를 배정을 했고 거기의 한 700억 정도가 국제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이 되었던 국제기구가 되었던 북한이 호응을 한다면 인도적인 지원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인요한 위원** 어느 장관님이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독일이 매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동독에 대한 여·야당 합의하에서 좀 장기적인 정책을 확실하게 마련하는 그런 건 굉장히 잘했거든요, 서독이 동독에 대해서. 우리도 여야가 머리 맞대고 또 정부랑 북쪽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정책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통일부장관 김영호** 대북 정책은, 인도적인 문제는 정치·군사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또 초당적으로 거기에 접근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 장관님, 지난달 13일이었나요? 전체회의에서 저희가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된 내용, 정부와 협상 과정에서 그래도 얻어 낸 내용이라고 국민께 드러내신 내용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모 대상이라는 것이 또 두루뭉술하고 규모라든지 일시, 참석 그리고 주최, 어느 하나 정해진 것이 없어서 향후 협상의 공간이 있겠느냐라는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지금은 일본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데 두어 개의 복수 장소를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요. 시기와 또 참석, 수준 그런 것들은 점차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교섭 단계는 아니고요. 일본이 일단 어떤 안을 갖고 오면 저희들이 기본적인 우리의 입장, 고위급 인사들이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한 한 진정성이 보이는 그러한 추도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입장은 전달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협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위원 알겠습니다.

PPT 잠시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7월 26일 자 외교부 보도자료였습니다. 보시면 5번 항목부터 이렇게 제가 올려 났는데요. ‘매년 7, 8월 정도에 현지에서 개최된다’ 이 내용 기억하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이재정 위원 그러면 올해 7, 8월 지났으니까 올해는 사도광산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 안 열리겠네요? 어렵다고 봐야 되나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 표현이 제가 봤으면 올해부터라는 걸 삭제했을 것 같은데 올해는 7, 8월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협상이 늦게 타결됐기 때문에. 하반기 중에는……

○이재정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라는 내용을 삭제할 것 같으면 올해는 사도광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추도식 열리지 않는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닙니다. 올해는 열리는데 7, 8월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제 말씀입니다.

○이재정 위원 열린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이재정 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중에 열릴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구체적인 날짜를 지금 생각을……

○이재정 위원 구체적 날짜 아니라도 올해 열립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는 그렇게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위원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게 양해가 돼 있습니다, 올해 열리는 것으로.

○이재정 위원 어느 정도의 소통이 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이재정 위원 9월 5일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며칠 전에 받은 자료인데요. 협의는 진행 중인데 계속 검토 중이고 장관님 하신 말씀하고 비슷해요.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국내적으로 일시·장소·인사 세부사항을 검토 중이고 우리 측 참석자는 내부 검토 중이고 그 내용 쪽 보면 그냥 일본의 결단을 한없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맞출 수밖에 없다. 거기에 맞추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정 위원 그냥 의지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희도 지금 점검해야 되는 입장인데 뭐 하나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알아보니까 이 추도식은 일본이 주최하는 거다 하는데 맞습니까, 주최는 일본?

○외교부장관 조태열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위원** 우리 희생자, 우리나라 희생자를 위해서 굉장히 유의미하게 우리가 관여해야 되는데 공동주최도 아니고 또는 우리 측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다른 공동주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 주최하는 것이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당연히 일본이 주최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희생시킨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재정 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이 주최하다 보니까 어떤 정부에도 우리는 관여할 수 없고……

○**외교부장관 조태열**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이재정 위원** 결국은 행사 개최 과정의 디테일에 협의할 공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아닐까요? 지금도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니, 합의사항이 주도식을 의미 있게 하기로 했으니까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말을 하고 의지를 반영할 수 있어야겠지요.

○**이재정 위원** 할 말은 언제든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우리가 당초 기대했던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 내야 될 공간이 있는 그런 협상이 아니라 그냥 의견개진 아닌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니지요. 저희들이, 요구사항이지요. 의견개진이든지 요구든지 뭐든지 그것은 표현하기에……

○**이재정 위원** 요구사항, 의견개진.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게, 그 디테일이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협상 결과를 가져왔다고 국민께 내세울 수 있었는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겨우 의견개진 하는 정도고 그 어떤 결정도 일본을 마냥 기다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10월, 11월, 12월 남았는데 열릴 것이라든가 말도 기대 수준이었고 일본의 고위급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느 정도 참여해야 고위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런 것들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재정 위원** 협의 중.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리고 주도식 개최안은 일본이 사도광산 등재 문제 협상 타결안의 일부로 먼저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약속에 맞게끔 진정성 있게 하도록 저희들이……

○**이재정 위원** 그 약속을 제시하면 그 약속을 받아들일 만하다 판단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협상 당시에 체크를 했었어야지요. 그 정도의 우리의 권한이 남아 있거나 이 정도 수준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런 날짜에, 올해는 어떻게 하시고 내년쯤부터 시작하신다든지 그런 얘기, 디테일에 있어서라도 조금 알고 계신 바가 있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 유감 있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게 지적하시면 그것은 제가 수용해서 들겠습니다만 협상이라는 것이 끝나고 나서 보면 이런저런 아쉬운 점이 있는 거니까……

○**이재정 위원** 아니, 끝나고 나서가 아니라 제가 협상 테이블에 있었으면 저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확인했을 것 같은데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위원님만큼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재정 위원** 협상 전문가들이실 것 같은데 그냥 하는 말 듣고 뒤돌아선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게 되지 않고……

○이재정 위원 지금 점검하는 과정에서 계속 들고 있습니다.

의원실에서 알아본 결과 외교부 최근 5년 사이에 니가타 현립문서관에 있는, 소장 중인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를 요청했지만 일본 측이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리고 또 일본이 강제로 임금을 은행에 저금하게 한 통장 명부 또한 요청했지만 받고 있지 못하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 명부는 미쓰비시 관련 개인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동의가 없으면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명부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 일본 측의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위원 최소한 어느 정도, 저희가 느슨한 합의라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라도 조건으로 협상 당시에 얻어 났어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할 만큼 이제 추도식 개최 여부조차도 불명확하고 누가 참석하는지, 제가 공무원들을 급으로 나누고 싶지는 않지만 소위 얘기하기를 9급이 오더라도, 9급 공무원이 그냥 행사 절차를 진행하는데 관여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디테일에 있어서 약속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재정 위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모양새는 협상 당시 협상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느꼈지만 지금 이행 과정을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계속 느껴집니다.

장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올해 추도식 개최되나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열립니다.

○이재정 위원 됩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열리도록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재정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계속 절차적 점검을 국회에서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위원 조국혁신당 김준형입니다.

통일부장관님, 독트린이 무슨 뜻입니까? 8·15 독트린이라고 하셨는데 독트린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독트린은……

○김준형 위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김영호 국제정세 전환기에 국가 지도자가 밝히는 대외정책의 비전, 전략, 추진방안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김준형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윤 대통령께서 8월 29일 기자회견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별로 새로운 게 없다, 우리 헌법에 그대로다’. 어제 또 장관께서는 그냥 기존의 통일담론을 그대로 잇는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새로운 통일론 만든다고 그동안에 5성급 호텔과 한정식집에서 39차례나 식사를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대로 이어져 있는 독트린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예

산을 낭비해도 됩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남북한에 살고 있는 개개인 모두가 자유와 인권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아주 명확한 지향점을 제시한 것으로……

○**김준형 위원** 다르다는 겁니까, 같다는 겁니까? 지금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아니, 대통령의 말씀은 헌법적 가치에 충실해서 그러한 지향점을 명확히 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기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 그걸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김준형 위원** 저는 다른 점이 하나 보여요, 정확하게. 화해·협력 단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이것이 흡수통일론이라는 의심을 받습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화해·협력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첫 번째 단계이고 그것이 입구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남북관계가 완전히 지금 단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김준형 위원** 단절돼 있을 때는 그걸 없애도 되고 다시 분위기가 좋아지면 넣어도 되는 게 독트린입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아니지요. 대화협의체를 제의해서 화해·협력 단계를 가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형 위원** 저는 장관께서 후보자 전 시절에, 장관 전 시절에 많은 설화를 남기셔서 지금도 그러고 계신가? 강연 자료를, 동영상은 아무리 요청을 해도 예산이 모자라서 제출 못 한다, 공식적으로 가서 예산을 들여서 장관이 하는 것들을…… 아니, 영상자료 남기는 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정말 없으십니까, 자료?

○**통일부장관 김영호** 의원실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었던 그 강연의 슬라이드 자료 그것은 제가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형 위원** 아니요, 발췌가 아니라 원래 설화가 많으셨잖아요. 전체 동영상을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통일부장관의 강연이, 저 개인의 강연도 다 녹화가 되는데 휴대폰으로도 녹화할 수 있는데 왜 그게 없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또 설화를 입을 만한 아주 이상한 발언을 하셨을까, 저는 그게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런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준형 위원**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47회, 바로 9월 9일, 9월에도 며칠 전에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47건입니다. 8월 13일 날 외통위 때 나오셔서 단체 만나겠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원실에서 물어보니까 당분간 계획도 없고 지금 실무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담당 부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는 이미 단체들도 다 알고 있는 거라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화낼까 겁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렇지 않고 저희 실무진에서 그 단체……

○**김준형 위원** 지금 이것 실무진이 얘기한 겁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단체들과 유선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김준형 위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민간단체한테도 확인해 보니까 전화통화 없었습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 이후에 저희들이 소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소통 결과 민간단체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안전법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김준형 위원** 그런데 장관님, 13일 날 나오셔서 분명히 만나겠다 하시고 통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안 하셨는데,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모자라서……

외교부장관님, 어제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장관님은 투표로 가도 우리가 진다는 생각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TF팀장은 질 게 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러면 장관께서 임명하신 팀장과 제대로 서로 소통이 안 되거나 의견이 다른 부분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임미애 의원님하고의 설전을 봤는데요. 맞습니다, 장관님. 역사적 사실은 표기를 해야지요, 우리한테 모욕적이라도. 그러나 그 앞에 일본의 강제성이나 불법성과 같이 가야지요. 그런데 강제성과 불법성은 굉장히 불분명하고 제가 보기에는 불법성은 전혀 표현 안 돼 있습니다, 사도광산에 가면. 이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모욕적인 것만 게재했다는 것은…… 홀로코스트 뮤지엄에 저도 가 봤는데 불법성을 앞에 해 놓고 그 뒤에 유대인을 무시하는 것들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 전시의 주목적은 가혹한 노동환경, 얼마나 노동환경이 가혹했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들로 채워져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때 일본인들의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차별적인 인식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그런 사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준형 위원** 유네스코 박상미 대사의 발언 좀 보여 주시지요, PPT.

일본은 저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박상미 한국 수석대표의 발언 중에 강제성이 단 한 구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대표가…… 저것 보십시오. 저 단어 0 회입니다. 그리고 확보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다음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아니, 확보 안 됐습니다. 장관께서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바로 직후에 강제 노동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2021년에 스가 총리는 강제노동을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똑같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보십시오. 조약상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뭘 확보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일본 사람들이 하는 저 말은 ILO 노동협약상의 소위 포스 레이버(force labor)라는 국제법상 쇠고랑 차고 노예처럼 나오는 그런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서 그런 걸 부인하는 거지 자기들이 뱉어 놓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포스 워크(force work)라는 건 일본 대표가 이미 한 말이고요.

○**김준형 위원** 그러니까 박상미 대사를 포함해서 장관이……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을 일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일본의 문제고 그것을 확보한 것은 우리 협상의 결과로 저희가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챙겼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김준형 위원**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조태열 장관님께 좀 여쭙게요.

아까 이재정 위원님도 잠깐 질의하셨는데요. 추도식, 제가 당초에 듣기로는 이르면 9월에 예상돼 있다 그랬는데 맞나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빠르면 9월에 하자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정치적인 것도 조금 고려가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정식 위원** 그러면 9월에 안 하는 건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9월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조정식 위원** 그러면 언제 할지도, 아직 날짜도……

○**외교부장관 조태열** 지금 날짜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 위원** 조율은 하고 있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마냥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합의한 사항인데. 이행이 제대로 되는지를 계속 점검해야 되니까요.

○**조정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유네스코 등재하면서 아예 그렇게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것 아닙니까? 공표한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합의의 내용으로 발표된……

○**조정식 위원** 사도광산 추도식은 우리나라에서 누가 참석하나요? 참석대상을 지금 검토하고 있나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일본 측의 참석 수준도 봐 가면서, 우리가 참석하는 수준을 올리면 일본의 수준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연계해서……

○**조정식 위원** 우리 정부에서 말이에요 요 근래 한일 간의 가장 큰 외교 현안 아니었습니까. 맞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조정식 위원** 그리고 아픈 역사가 담겨 있는 현장 아니에요. 첫 추도식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조정식 위원**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장관께서 직접 참석할 의향 없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직은 그런 생각을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조정식 위원** 적어도 정부에서 고위급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이 주최하는 추도식 이니까 일본 수준보다 더 높은 인사가 가는 것은 마땅치……

○**조정식 위원** 장관께서 가신다고 하면 일본도 그에 맞게 훨씬 높이겠지요, 정말 한일 관계를 존중한다면.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럴 수 있겠지요.

○**조정식 위원** 그렇게 먼저……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제가 참석하는 건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조정식 위원 그러니까 그럴 각오로 보다 공격적으로 일본 측과 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해 왔고 앞으로 더 강도를 높이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니가타현 현립문서관에 있는 반도 노무자 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공식 요청을 했었나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했습니다.

○조정식 위원 일본에서 답변이 됩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답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조정식 위원 니가타현 현립문서관에 있는 것은 필름이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원본을 기업이 갖고 있고.....

○조정식 위원 필름은 정부 소유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다 하더라도 동의가 없으면 제공할 수 없다는 거지요, 원 소유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조정식 위원 열람도 못 하나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조정식 위원 열람도 못 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은 또 다시 의논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조정식 위원 최소한 확인하는 노력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일본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명부와.....

○조정식 위원 장관님, 추도식을 하는데 추모할 대상이 없는 추도식이다 이걸 말이 안되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 말씀 이해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조정식 위원 그러니까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조정식 위원 저는 그런 허울뿐인 추도식은 우리는 곤란하다고 강하게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가 또 명부가 500여 명이 있는 명부가 따로 있고 여러 학계에서 수집한 자료도 있기 때문에 그냥 허공에다 대고 하는 추도는 아니고요. 좀 더 완벽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니가타현 소장 명부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원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서 힘들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조정식 위원 저는 우리가 세계유산 등재에 흔쾌히 동의해 줬으면 그리고 추도식을 하겠다고 하면 최소한 그 정도 요구는 받아 내고 또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아주 세계 요구를 하는 것이 주권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요구를 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만약에 추도식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추도 대상도 없고 허울뿐으로 그냥 슬쩍 넘어가게 되면 그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두 번 능멸을 당하는 꼴이에요. 저는 그 점을 명심을 하고 아주 단호한 의지를 갖고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서 일본 측에서도 이 추도식에 대해서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한국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이 추도식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대응도 하시고.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정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난 6일 날 한일 정상회의 열렸었잖아요. 그때 사도광산 추도식 얘기는 없었나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추도식 얘기는 없었습니다. 현안 문제에 관한 토의는 안 하고 미래에 관한 얘기, 전반적인……

○**조정식 위원** 식사까지 하면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성의를 갖고 마무리를 해 달라라는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상이?

○**외교부장관 조태열** 총체적인, 포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언급은 안 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 대통령께서 사도광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협상 과정도 필요할 때 중요한 고비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정식 위원** 장관이 좀 더 단호하게 챙겨 주셨어야지요.

지금 일본 정부에서 협조를 안 해 주니까 외교부가 어쨌든 간에 희생자 명부나 유족도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명단 요청한 적 있지 않습니까. 했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종류의 명부 요청을 수십 년 전부터 해 왔지요.

○**조정식 위원** 여기까지만 질의하고요. 단호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통일부장관님, 시간이 없긴 한데 지난 8·15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얘기한 적 있었지요. 이것 장관의 뜻입니까, 장관 아이디어예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건 통일 독트린에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께서도 그런 생각 갖고 건의를 하셨어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저도 북한 내부의 상황을 볼 때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더 많이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정식 위원** 통일부에서 지난 4월 15일 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통일연구원에 연구용역 의뢰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잘 모르세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제가 아직 정확하게……

○**조정식 위원** 그 연구용역 내용에 보면, 제가 PPT를 띄울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 중에 보면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확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북한 내부로 정보를 유입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방안의 하나가 USB입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통일부가 하는 것은……

○**조정식 위원** USB라고 생각하세요, 정보접근권의 확대에서?

○**통일부장관 김영호** 민간단체들의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그런 것이고 구체적인 방법은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장관께서 통일 독트린에 관계된 강연을 하면서—지난 8월 23일 날—현재 북한에는 핸드폰이 700만 대가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을 못 보니까 핸드폰에 USB를 꽂아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도록 하면 이게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기억하시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조정식 위원** 즉 대북전단 풍선에 USB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통일부에서 권장한 건가요? 이게 유효한 수단인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에서 구체적인 그런 것까지는 일일이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조정식 위원** 그러면 장관이 언급한 USB 이것 어떻게 전달하겠다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한에 핸드폰이 700만 대가 있고 북한 주민들이 모듈이라는 걸 꼽아서 그 끝에 USB를 연결해서 보는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경기도 파주갑 윤후덕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우키시마마루호 침몰 사건 아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윤후덕 위원** 이 사건은 1945년 8월 24일 광복을 맞은 한국인들이 조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일본 해군 배에 탔는데 교토의 앞바다에서 폭발을 일으키며 침몰했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수천 명, 많게는 한 8000명까지 승선을 했고 대부분의 사람이 죽고 또 일부 생존한 그런 사건이었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윤후덕 위원**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일본에 승선자에 대해서 명부를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윤후덕 위원** 그것도 외교부가 그런 노력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79년 동안 일본이 전혀 명부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그러다가 며칠 전에 외교부에 이 명부의 일부를 제출했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윤후덕 위원** 그것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대사관에 와서 본국에 왔고 그리고 외교부가 이것을 며칠 전에 행안부에 이첩을 했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윤후덕 위원** 관련 부서에 그렇게, 과거사진상단 이쪽으로 이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 그리고 또 유가족, 아직 남은 생존자들이 애가 타요. 내 이름이 거기에 있는지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몇 명이나 확보가 된 거예요, 몇 명?

○**외교부장관 조태열** 19건의 자료를, 명부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일본이 내부조사를 마무리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요, 외교부도 행안부도 국민에게 그리고 또 애가 타고 있는 유가족들한테 아무런 설명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몇 명이나 명부를 제출받았는지 그리고 그게 이름, 나이, 어디 고향 어느 사람인지, 이를테면 경상도 어디인지 이런 것 그런 것들이 식별이 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희들은 명부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이 국회에서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알려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외교부장관 조태열** 몇 명인지는 확인돼서 알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 사항을 제가 체크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요. 이게 한국 정부가 이번에 명부가 온 것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언제 발표하겠다 이런 거라도 이 자리에서 알려 주세요. 그래야지 기다리는 사람들도 기다리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일본 내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계속 속속 또 추가 자료를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대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식별되는 사람이라도 그 순간 알려 주세요. 그리고 그나마라도 명부를 전체 다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것을 진상조사랄까 이런 팀을 만들어서 외교부하고 행안부에서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혀 주세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알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외교부장관 조태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외교를 통해서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 정부에 그런 제안을 공식적으로 해 주세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어저께 윤상현 위원님이 관동대지진 사건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일차적으로 우리의 사료 검사 결과를 토대로 어느 정도의 입장이

정리된 그 근거를 가지고 그런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냥 순수한 자료만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이른 바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1차 용역을 하든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한 후에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후덕 위원** 이게 79년 만에 부인을 하던 일본 정부가 태도가 바뀐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큰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기다린 게 79년 기다린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윤후덕 위원** 외교부장관께서 어떻게든 외교 노력을 더 하셔서 명부를 더 확보하고 식별이 상당히 수준 있는 것들을 확보해 주세요. 그리고 좀 알려 주시고 그렇게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외통위원회 차원에서도 그런 촉구안, 결의안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유념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통일부장관님, 며칠 전에 내 지역의 광탄면에 오물풍선이 창고 지붕에 떨어지면서 불이 났어요. 이게 무려 소방 추산으로 8729만 원의 피해가 일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보상해 줄 거예요?

아니, 문제는 이게 아직 준공 직전의 공장이었어요.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정부가 즉시 신속하게 보상을 해 줘라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물풍선에 의한 피해 지원은 현재 법률적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는 서울시 그다음에 지자체의 경우는 지자체가……

○**윤후덕 위원** 지자체라는 게 파주시예요, 경기도예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 부분은 행안부하고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자체가 먼저 보상을 하고, 현재 국회 차원에서는 법령 개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

○**윤후덕 위원** 아니, 하여튼 이것은 피해가 생기면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몰라요. 주인이 이것을 몰라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러면 통일부가 행안부나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게 불이 나는 게 이 정도면 또 그런데, 산불이 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거 제발 좀 서로 협의하고 협상해서 쌍방 간에 풍선만큼은 자제할 수 있게 통일부장관이 노력하세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통일부장관님이 풍선도 해결해 주지 못하면 큰일 났지요. 통일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양쪽의 풍선이라도 자제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사도광산 얘기도 많이 했고 군함도 얘기도 했는데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할 때 일본 대표가 그 앞에 2015년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리니까 ICOMOS를 통한 또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다 명심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명심하고’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2015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15년의 약속을 지키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가운데 보면 어제 표를 잠깐 보셨습시다만 총, 지금까지는 자료가 일곱 군데 정도 밖에, 7개 사이트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 강제동원 대상이 조선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연합군 포로도 있고요, 중국인 포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ICOMOS 조사단이 산업유산정보센터에 가서 봤더니 연합군 포로에 대한 기록은 그 어느 곳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 유산정보센터는 하시마섬에 대한 내용만 주로 다뤄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일본이 피해 나가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하시마에는 지금까지 나온 기록으로 보면 조선인들하고 중국인 포로 정도만 있기 때문에 그것만 어떻게든 흔히 말하는 격하시키기 위한 자료센터로서 저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1일까지 이행점검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1940년대에 있었던 조선인을 비롯한 실질적으로 강제동원되고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여타 국민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연합군 포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미군, 영국군, 호주군, 네덜란드군 할 것 없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희들이 요구해서 들어간 것으로……

○**한정애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정확하게 기록에 남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약속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해당되는 국가들과도, 국가의 대사들과도 조금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유산이기는 하지만 2015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질곡의 역사를 다 담아야 한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대유산이기는 하지만 그 근대유산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지도 역시 적혀져야 한대라고 하는 게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각 해당되는 국가들과 협의해서 올해 12월 1일까지 있었던 이행점검보고서를 낼 때 우리의 의견이 정확하게 각국의 의견과 함께 적힐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조태열** 세계유산위원국들과 계속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아쉽게도 일본이 국제사회의 그런 비판을 외면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계속 세계유산위원회가 결정문을 통해서 비판을 하고 시정하라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이 그런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냥 그 길을 가겠다는 거라면 저희들이 강제할 길이 없습니다.

○**한정애 위원** 강제할 길은 없지만……

○**외교부장관 조태열** 다만 위원회의 결정문을 꼭 끌어내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끝없이 문제를 삼아야 합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지금 소녀상이, 세계 곳곳에 세워진 소녀상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직접적으로 안 하겠지만 대사관이나 영사관이나 또는 민간단체, 기업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런 정황을 보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런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은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권고한 것이고 그것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희도 이번 일본 대표의 발언에도 그것을 일부러 제가 연계시키기 위해서 엮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광산 문제를 다루면서 군함도 문제도 계속 제기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엮기 위해서 그런 베어링 인 마인드(bearing in mind) 이후에 문안을 넣은 것입니다.

○**한정애 위원** 12월 1일 이행점검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한국 정부가 어떻게 협의를 했고 협상을 했고, 여타 국민이라고 하는 연합군 포로 또는 중국인 포로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해서 이것을 담기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외교부의 그 노력을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쉬운 것은 다른 나라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지요. 연합군 포로 해당 국가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만큼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애로 사항입니다.

○**한정애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것은 유산위원회에서 저희가 어쨌든 총대를 맨 것이니까 그렇게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렇게 해서 상임위에 또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기는 한데요.

다음 슬라이드 하나 보여 주십시오.

이게 지난해 11월 9일 날 있었던 태평양 도서지역 포럼, PIF지요. PIF에서 나왔던 정상 성명입니다. 여기 보면 ALPS 처리 핵폐수라고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태평양 연안국가들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호주를 비롯한, 18개 국가지요.

18개 국가는 각국이 이 ALPS 처리 핵폐수의 방류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고 이것이 30년 이상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PIF의 계속적인 의제로 또 일·태평양 도서지역 정상 포럼에서도 상설 의제로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고 실제 올해 7월 18일 날 일본·태평양 도서지역 포럼에서 향후 3년마다 한 번씩 있는 PALM이지요. 일·태평양 도서지역 포럼에 상설 의제로 올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일본이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해당되는 내용을 태평양도서국들에게 설명을 하라라고 하는 것까지를 담았습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한정애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괴담 선동 이런 식으로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태평양 지역의 도서국들은 자국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일본에 오히려 그 입장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너무 이렇게 연하게 또는 저자세로 일본을 대한다면, 중국에 그 많은 핵 원전이 있는데요. 만약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할 겁니까, 중국 정부가 ‘아, 우리도 일본하고 똑같이 잘 처리하고 있다’라고 하면?

○외교부장관 조태열 오염수 문제는 저희가 태평양도서국보다 못 한 자세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훨씬 더 정교한 관심 속에서……

○한정애 위원 일부 정부와 또 여당 위원들께서 처리수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까지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은 표현상의 문제이고요. 내용에 저희들이 취한 실질적인 조치는 태평양도서국하고 비교할 정도가 아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정애 위원 자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또 바다 해양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30년 이상 배출되는 상황입니다. 그 누구도 그 영향이 어떨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야 하고요. 그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협상이나 앞으로의 회의에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원 위원 질문하기 전에 자료요구부터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3월 25일에서 4월 3일까지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방산 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에게 회의 소집을 통보한 날짜가 언제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외교 문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제출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이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문서를 제출해 달라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공관장들한테 회의 소집을 통보한 날짜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그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기 외교부장관님,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 부분은 제가 담당 간부들하고 의논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예.

홍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원 위원 통일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무엇입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헌법 4조에 기초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홍기원 위원 1994년도에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렇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런 거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홍기원 위원 그러면 8·15 때 대통령께서 발표한 통일 독트린 그것과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간에는 모순되거나 대립되거나 이런 요소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그렇지 않습니다.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장관님께서 9월 6일 날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부가 발표한 통일 독트린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인권과 정보 접근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우리 제안에 북한이 반색하며 나올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단기적 성과를 위해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대화를 위한 대화에 치중하는 것은 일시적 대중요법일 뿐이며 통일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맞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홍기원 위원 제가 통일 독트린 내용을 아무리 읽어 봐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홍보 또는 문제 제기 강화하고 또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한다 빼고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우선 잘 아시겠지만 94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국제 협력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강조가 좀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그것은 통일방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에 통일 비전을 제시하면서 대통령께서 보완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런데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통일 독트린 제안에 북한이 응할 것이라는 기대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누구나 다 알다시피 북한에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는 북한 주민에게 소위 정보 접근권을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북한의 반감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장관님 말씀도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이번 통일 독트린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대

화 협의체를 제안하셨습니다, 의제도 제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다음에 정보 접근과 관련해서는 북한 정권과는 달리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반영해서 정부의 새로운 통일 정책은 그런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만약에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더 많이 알게 된다고 한다면 그게 결국은 북한 정권의 정책이나 행동이나 이런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런데 장관님도 북한이 이것에 대해서 반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또 대한민국 한반도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통일 독트린의 내용이 북한을 움직이거나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거나 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3%는 통일 독트린은 실현이 불가할 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남은 3년 동안 이 통일 독트린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런데 위원님, 방금 인용하신 여론조사 그것은 하나의 여론조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가 지난 30년간 굉장히 많이 변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호응하는 대북 정책이, 통일 정책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 철학과 원칙은 자주·평화·민주이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렇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리고 통일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점진적·단계적 절차를 거치는 데 첫째가 화해와 협력,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렇습니다.

○**홍기원 위원** 두 번째가 남북 연합 단계, 세 번째가 통일 국가, 윤석열 정부도 남북 연합 단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이게 우리의 기본 방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렇습니다. 그게 공식적인 통일방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런데 우리 국민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아까 장관님께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독트린이라는 게 대외정책의 비전이고 전략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그 현실을 자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홍기원 위원** 외교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7월 17일 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양금덕 할머니 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지 않습니까? 인권위가 2022년 12월에 양금덕 할머니를 국가 인권상 후보로 선정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외교부가 의견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7월 17일 회의 때 인권위에 답을 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 의원실에 알려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아마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큰 것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실제로도 다른 분들이 그분만 훈장 수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것이 있다고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고 관계 부처하고도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 검토하는 데 2년의 시간이 부족합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결론이 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기원 위원** 지금 양금덕 할머니 연세가 95세예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개인적으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훈장 수여하는 문제가 그렇게 간결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기원 위원** 훈장을 수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의견을 인권위에 제시하고 그래서 인권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그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통일부장관께 질의하려는데요.

오토 워비어 아시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김기현 위원** 미국 청년이 북한 여행을 갔다가 17개월 동안 억류, 나중에는 심한 고문까지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어서 결국은 사망을 했는데 그 부모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서 약 5억 달러, 한 6000억 정도 되는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김기현 위원** 그래서 그 소송을 한 결과를 가지고 가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북한 재산에 대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그것이 국제 뉴스로도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뉴스로 계속 보도되고 있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김기현 위원**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왜 미국에서만 일어나느냐?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는 왜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평소에 늘 가져왔습니다.

이런 겁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 정권이 폭발물 설치해 놓고 대놓고 파괴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김기현 위원** 당연히 우리 재산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문제인 정부 시절 내내 저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마는 생각이 달랐던 정부였던 탓인지 거기에 대한 진도가 나간 바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하고 국제적으로도 이 문제를 끝까지 우리가 물고 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 오물풍선이 넘어와 가지고 기폭제가 설치됐다 이런 기사가 최근에 나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아직 조사가 더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여러 가지 추정되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이런 민간 피해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기민하게 잘 대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북한 정권이 저지른 범죄행위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김기현 위원** 당연히 북한을 규탄하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이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여러 가지……

○**김기현 위원** 다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를 북한 정권에 다 배상받아라 그러면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정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자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북한 정권의 어떤 불법적 행위로 인해서 발생되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당연히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하고 조치도 해야 되겠지만 그 구상권을 가지고 북한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런 일들을 그냥…… 북한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왜 우리 정부가 다 책임을 지고 북한에 대해서 입도 뺏끗 안 하느냐 그런 불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사후적으로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법적인 조치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 위원** 북한의 이런 민간에게 피해를 주는 도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잘 대처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유의해 주셔야 되겠고 동시에 거기에 대한 민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그 사태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외교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박근혜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무효화시켰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김기현 위원** 그런데 무효화시킨 것은 또 아니라는 말도 하고, 무효화시킨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러고 나서 5년 임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내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일본의 무슨 진정성 있는 사과나 좀 더 진전된 사과를 받아낸 것도 없고 그렇다고 배상을 받아낸 것도 없고 일본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5년 임기가 지났습니다. 제 말이 맞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 개인적으로 그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제가 늘 가지는 생각은 이겁니다. 단순히 반대하고 비판만 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일본 나쁜 사람들이야, 일본 나쁜 나라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즉창가를

불러야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작 피해는 누가 봄니까? 국민이 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위원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될 책임 있는 정부가 '일본은 나쁜 나라야, 일본 정부가 잘못하고 있어' 하면 그게 얼마나 손쉬운 방법이나마는 그것이야말로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점에서 일본의 여러 가지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 또 보다 진전된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사과와 태도 이런 것들이 아직 여러 가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씩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 책임을 해야 된다, 그것이 정부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도 2015년 합의 부분에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추모, 여러 가지 공동으로 하기로 한 행사들이 있는데 합의가 파기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중요한 합의들이 다 무산된 것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는 합의의 정치적인 그런 논쟁에도 불구하고 계속 양국이 이어 가야 될 중요한 부분인데 정치적 논쟁 와중에 다 무산된 것 같은 것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기현 위원 한일 간 GSOMIA 협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GSOMIA를 전 세계의 30여개 국과 맺고 있는데 유독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에 대해서는 심지어 자위대가 한반도 진출하기 위한 통로로 만들어 준다 하는 터무니 없는 주장까지 내세우면서 죽창가를 불렀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인 정부 시절에 이것을 파기했거든요, 2019년에?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김기현 위원 파기를 했는데 또 그러다가 나중에 조건부 연장한다 그리고 결국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다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김기현 위원 결국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그냥 일본과의 관계만 더 악화됐을 뿐이다, 국민들만 피해를 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우키시마호 승선원 명부를 일부나마 확보한 것은 굉장히 큰 진전이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정부들이 이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이 끝까지 숨기고 폭발 원인이 무엇인지, 희생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조차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일본이 일부 승선자 명부를 제출했다, 19건을 제출했다면서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김기현 위원 그리고 일부 나머지 여타 자료들은 일본이 내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제공받을 예정으로 계속 우리가 요구하고 있다 이것 맞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맞습니다.

○김기현 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게 생기냐? 우리 국민들, 그 피해를 입었던 분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그리고 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심사 과정에 이 사람들이 자료가 없다 그래서 다 기각당했잖아요. 각하, 기각 당했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과거에 그랬습니다.

○김기현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재심의를 통해 가지고 배상을 해 줄 수 있게 되고 명예 회복을 이룰 수 있게 되니까, 이런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정부가 이루어 낸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고 추가적인 정보 요구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조치들을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이 어떠세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일본이 그런 걸 다 예상하면서도 명부를 제공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부로서는 당연히 명부를 받은 후에 필요한 검토를 거쳐서 이분들이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찾도록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락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통일 독트린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동안의 북한을 비롯한 주변 정세의 변화 등을 반영한 진화된 형태의 통일방안을 생각해 볼 시점이라는 것은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통일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자리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장관님께 주문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통일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생각을 가진 분들하고만 소통하지 말고 또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국민적인 관심과 호응을 얻으려면 폭넓게 의견 수렴도 하고 국회에도 보고하고 협의도 하면 좋겠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보기에는 체제 잠식을 위한 의지가 노골화되었다 이렇게 볼 겁니다.

통일 독트린을 들여다보면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계속 자유, 자유, 자유입니다. 그리고 주민과 당국을 분리해서 결국 북한 주민, 주민, 주민에 대해서 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을 배제하고서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굴곡들이 있었지만 북한의 당국과 얘기를 해서 통일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북한 당국과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또 이렇게 해서 한쪽하고만 소통해서 방안을 만들어 내면 국내에서 어떤 호응을 얻겠다는 것인지 극히 의문시됩니다.

외신들의 평가도 아주 혹평입니다. 사실 지금 상황을 냉정히 말하면 정부가 오래 노력

하고 대통령이 공들여서 발표를 하셨지만 이 방안은 국내의 반응을 보거나 북한의 태도를 보거나 국제적인 반응을 보거나 사실은 영어로 치면 데드 온 어라이벌(dead on arrival)입니다. 도착 즉시 사망했습니다. 동력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 방안은 3대 통일 비전, 3대 추진 전략, 7대 방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숫자가 우연인지 모르지만 3, 3, 7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수받을 것 같이 기대하는 모양인데 박수받기는커녕 지금 완전히 냉담한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이에 호응한 나라는 일본의 기시다가 좋은 말 한 것, 미국에서 좋은 말 나온 것이지만 그것은 전체 동력에 큰 보탬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장관은 이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정부는 북한에 이번 통일 독트린을 통해서 대화협의를체를 제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당국을 이번 통일 독트린에 배제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대화협의체는 대통령께서 직접 제안을 하셨고 또 의제에도 제한이 없다, 실무적인 차원부터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의 호응을 저희들이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성락 위원 제안의 어떤 범위나 의미를 감안할 때 실무 대화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태산명동에 서일필 격입니다. 북한이 받지도 않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제는 윤 정부의 통일 독트린이 이렇게 돼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원래 30여 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통일방안은 그대로 남았고 그 통일방안을 시대의 변화와 정세의 변화에 맞게 진화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았다고 봅니다. 아마 이게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외교부장관께 여쭙보겠습니다.

사도광산 문제로 고생을 하셨는데 연일 이 문제가 거론되니까 좀 불편하시겠습니다. 그런데 폄하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여론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복기해 볼 점들이 있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해서 62.4%가 잘못하고 있다, 32.9%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아주 최근 통계입니다. 그런데 62.4% 중에서도 ‘아주 잘못된다’가 54.2%, ‘다소 잘못된다’가 8.2%입니다. 그러니까 냉정히 말하면 정부를 지지하는 지지층 외에는 거의 모든 국민이 잘못하고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이 여론을 잘 대처하지 않으면 사실 일본하고의 협력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끌고 갈 수 있느냐 하는 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한두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일본 대표가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마지막 발언하면서 ‘총독부의 관여하에 모집과 관 알선이 시행되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정부는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총독부가 관여하에 모집, 관 알선, 징용 얘기를 공개적인 국제회의 석상에서 일본 대표가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말한 모집, 관 알선은 여태까지 일본이 강제성이,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징용됐던 것과 또 다른 방법으로 한국인 노무자들이 동원됐다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일본이 인정한 부분이고 또 거기에 직접적으로 강제라는 말은 없지만 조선총

독부가 관여했다라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강제성을 드러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성락 위원** 일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관 알선이나 모집도 다 동원령이라든가 징용령이라든가 등 어떤 룰 위에서 합법적인 행정행위로 해석할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징용만이 강제징용령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타 모집, 관 알선은 또 다른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일본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꼭 그것이 합법성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저희들은 해석하지 않고 있고 일본도 그런 것을 알면서 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 먼저 통일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북한 수해 관련해서 최근의 북중 관계 관련 질문인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8월 4일 날 위로전문을 보냈고 라오스 주석은 8월 23일 날 전문을 보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위로전문을 아직 안 보냈고요. 이런 것을 과거 사례로 보면 중국에서 이렇게 위로전문을 보내지 않은 것은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중국 외교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북중 간의 관계는 전혀 이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입장을 유념하면서 정부는 북한과 중국 관계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기웅 위원** 또 하나는 최근에 북한의 주요 행사에 왕야권 대사가 참석하지 않고 대리대사가 참석을 한 것으로 돼 있고 지난달 9일 이후에 왕야권 주평양중국대사가 공개 활동이 없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현재 주평양중국대사가 현지에 없는 것 같은데, 이 임을 한 것 같은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혹시 외교부장관님, 뭐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 질문을.

○**김기웅 위원** 지금 주평양 중국대사가 지난달 9일 이후에 공개 활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북한 주요 행사에 대리대사가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저희가 분석해 보면 왕야권 대사가 현재 이임을 했거나 북한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대리대사가 계속 한 달여 활동을 하니까 추정이 되는데 혹시 그 관련해서 뭐 알고 계신 게 있으시나 이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대사가 귀국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관련된 정보는 제가 없고요. 다만 지금 북한과 중국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 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과거의 오랜 사례를 봐도 북한에 이런 수해가 있는데 중국이 어떻게 보면 위로전문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특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나 다른 나라들이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다른 두 가지인데, 지금 오물풍선 관련한 피해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민방위

법이나 민방위기본법, 재난안전법 이게 행안위에서 협의가 되고 있고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 의견 하나는, 이게 지금 오물풍선에 대한 피해도 있지만 예전에 박왕자 씨 같이 피살된 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연평도 포격으로 피해를 보신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북한의 도발이랄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국민들, 군인 말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계신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민방위법이나 재난안전법에서는 그것을 다 포용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차제에 북한의 도발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손실보상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대위변제 형식으로 보상 및 지원을 하는 이런 쪽의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정부가 이를 대위변제를 해 주고 손실이지요, 손실보상을 해 주는데 이게 경우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에 오물풍선 말고 북한의 행위에 의한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법 하나를 새로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통일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 법안이 제출되면 통일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끝으로 하나는, 오늘도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건의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정부의 대북 프레임이 지금까지 분단 이후에 총 한 두세 번 정도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 6·25 전쟁 이후에, 분단 이후에 북진통일론을 했는데 69년에 광 독트린이 나오면서 냉전이 데탕트로 갈 때 73년 6·23 선언을 통해서 소극적 평화공존론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성립이 됐지요,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이후에 85년에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나오고 사실상의 냉전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88년 7·7 선언을 통해서 적극적 평화공존론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북진통일론에서 소극적 평화공존론에서 적극적 평화공존론으로 크게 이 판들이 변해 왔는데 저희가 볼 때 근래의 국제 정세가 또 다른 판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큰 변화와 맞먹는 정도의 대북 프레임 전체를, 통일정책 포함해서 정책 프레임 전체를 한번 검토해 보고 정세 변화에 맞는 것으로 뭔가를 새로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였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번 통일 독트린 자체를 이렇게…… 대북 제의는 이미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으로 제안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담대한 구상은 대북 제안입니다. 그것은 대북 제안이고 지금 세계의 큰 판이 바뀌고 있으면 예전에 북진통일론에서 6·23 선언의 소극적 평화공존론, 북한 체제 인정하고 그다음에 냉전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7·7 선언을 통해서 적극적 평화공존론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정세 변화를 보면 이것에 맞는 새로운 대북정책이나 통일로의 어떤 프레임워크 자체가 한번 뭔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하신 이 통일 독트린을 저는, 본 위원은 그런 방향에서 뭔가를 잘 검토해 보고 만들어 가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떠신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정부도 이번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70년 초반에 미중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 남북한이 7·4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 초에 소련, 동구권이 붕괴되었을 때 남북한이 회담을 해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11월 초에 미국 대선이 있게 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중 전략 경쟁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국제 정세에 큰 변화가 있고 북한 내부도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커다란 변화를 염두에 두고 이번 통일 독트린이 제시가 되었고 그런 방향에서 상황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거기에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승 위원 경기 화성병 권철승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상임위 때 지금 대북단체들이 보내고 있는 풍선 속에 있는 USB가 저작권 위반 소지가 아주 크고 실제로 문체부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거의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문체부장관님하고 한번 협의하기로 하셨는데 협의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문체부장관님하고는 협의하지 못했고 문체부로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저작권과 관련된 자료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이것 조치를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위원님, 지금 그 문제는 그 단체……

○권철승 위원 조치를 하십시오, 불법행위니까 조치를 하십시오.

○통일부장관 김영호 위원님, 그런데 지금 그 단체가 항공안전법과 관련해서……

○권철승 위원 아니, 그것하고 별개로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철승 위원 예, 그것 다 병합해서 하겠지요. 주무부처라고 저는 실제로 보이는데요 안 하시면 이것은 정부에서 직무유기로 그렇게 오해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여하튼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권철승 위원 아니요, 지켜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 하셔야 됩니다, 명백한 불법행위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외교부장관님, 최근에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단 일부가 입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의 일본 입장이 침몰과 함께 유실되었다, 없다 이런 게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여러 가지 이유를 댔었지요.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의 입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일본에서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구를 좀 하셨습니까? 그동안 거짓말한 것에 대해 우리는 굉장히 유감이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해라 이런 입장을 밝히신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거기다 조치를 하듯이 사과하라는 얘기부터 먼저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철승 위원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지요? 저는 당연히 사과부터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앞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 입장은 사과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다음에 이번에 기시다 수상이 와 가지고, 한국에 와서 과거사에 대한 사과도 없었고 총리 자격으로 온 분이 ‘개인적으로 과거 일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 우리 국민들 가슴이 아팠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기시다 총리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철승 위원** 예전에도 일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요. 그때마다 한국에서 여론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그렇게 했거든요, 한국까지 와서도. 그런데 별문제 없다라는 입장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제가 오늘 입장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 와서도 했는데요. ‘강제성 문제에 대해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이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늘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T, 21년에 보시면 ‘중군위안부’라고 하는 용어를 안 쓰는 걸로 폐기를 했습니다. 이게 내각의 각의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권철승 위원** 일본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중군위안부가 없습니다. 그냥 위안부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용어를 그렇게 정리한 것으로 압니다.

○**권철승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각의 결정이기 때문에 세세연년 가는 겁니다. 각의에서 달리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이지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고노 담화 때는 중군위안부라는 말을 당시 관방장관이 직접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을 뒤집은 거지요. 정면으로 뒤집은 겁니다.

그다음이요.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 위안부 합의서인데요. 일본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일 간 위안부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1항에 가면 ‘군의 관여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안부라고 하는 용어 속에 중군위안부 혹은 일본군 위안부가 포함된 개념으로 보고 해석을 하면 양립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쪽의 문장을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1년 일본의 각의 결정 때문에 일본에는 중군위안부가 없거든요.

그런데 중군위안부 할 때 ‘군’이 일본군 맞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맞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 중군위안부가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합의 내용의 실질적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저는 서로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한 걸로,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일본 정부가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었기 때문에 이 합의서에서 실제로 합의한 내용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이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당시 합의 내용은 문안을 합의한 것이 아니고요. 합의 내용을 각자 외교장관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문안이 다른……

○권철승 위원 합의를 해서 발표를 각자 했을 거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지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우리가 늘 쓰던 표현이었어요.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요. 일본에서 저렇게 위안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일본군 위안부가 포함된 것이라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당연하지요.

○권철승 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21년에 그 입장을 일본이 뒤집었잖아요. 없어졌어요. 일본군 위안부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면 저 합의를 했더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가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것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21년에 저렇게 입장을 뒤집는 바람에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사실 휴지조각이 됐다고 봐요. 일본이 파기한 거라고 지금 그렇게 보이거든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2015년 합의 내용이 유효하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고 그 이후에 정부가 동일하게 취한 입장입니다.

○권철승 위원 그럼요, 유효하다고 했는데 21년에 일본이 입장을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정변경이 엄청나게 생긴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입장을 안 가지면 안 되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2015년 합의가 유효하다고 한 것이 우리 입장이니깐, 21년도에 일본이 취한 입장은 일본이 국내적으로 한 거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요.

○권철승 위원 아닙니다. 일본에는 일본군 중군위안부가 없어요. 나중에 입장을 뒤집었기 때문에 이 합의 내용이 가지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봅니다. 나중에 그러면 다른 이야기 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래 합의를 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이견이 있는 상태로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러면 합의가 아니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2015년 합의는 유효하고 그것을 존중한다는 것이 입장……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 뭐가 유효하냐니까요? 유효한 내용이 뭐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러니까 합의 자체가 지금 거의 깨졌기 때문이에요 유효하다는 말만 남아 있지 거의 무효화시켰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무효화시켰고 일본이 거기에 대해

크게 반발했고 그것이……

○권철승 위원 문재인 정부가 무효화를 시켰다고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2015년 합의를 거의 무효화하고 파기……

○권철승 위원 존중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마지막 5년 정권 끝날 무렵에 그렇게 공식 입장을 밝혔지, 아까 김기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년 내내 합의를 무효화시키는 조치를 취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굉장히 크게 반발했지요.

○권철승 위원 누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문재인 정부 때요.

○권철승 위원 어떤 조치를 했는데요? 어떤 조치를 했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2015년 합의와 TF 해 가지고 사실조사 해 가지고 그것을 다 비판 하시면서 거의 무효화시켰지요.

○권철승 위원 비판할 수 있지요. 비판할 수 있지만 합의를 존중……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래서 유효하다는 말은 마지막에 그냥 공식적으로……

○권철승 위원 아니, 무슨 말씀 하십니까, 최종적으로 존중한다고 했는데?

일본에서는 각의 결정으로 이 합의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외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는 ‘중군’이라는 말이 빠진 것이 합의를 제외시키고 변경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철승 위원 한자리에서 말을 바꾸시면 어떡합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거기 ‘군의 관여하에’라는 게 분명히 있고, 당연히 일본군 아니면 뭐겠습니까? 우리 군대를 따라갔겠습니까?

○권철승 위원 아이참. 장관님, 그것은 2015년이고 2021년에 각의 결정으로 입장을 바꿨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글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이하 우리 정부가 2015년 합의가 유효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요 뭐가 유효하냐고요. 합의한 내용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저쪽에서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합의한 내용이 없어졌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니, 합의는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안 지키는 것은……

○권철승 위원 뭐를 합의했는데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일본이 안 지키는 건 그다음의 문제고 합의가 유효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란니까요.

○권철승 위원 아니, 유효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게 어거지를 쓰시면 됩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내용이 왜 없습니까, 엄연히 지금 살아 있는 내용이에요?

○위원장 김석기 권철승 위원님, 나중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외교부장관님, 이번 5일 날 일본 측으로부터 우키시마 승선원 명부 받은 것은 참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명부가 전체 명부는

아니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일부입니다.

○이용선 위원 일부고 거기에는 조선인 실명이 적시되어 있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이용선 위원 지금 우키시마 사건은 원인이라든지 피해 규모에 대해서 견해차가 많은 걸 아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이용선 위원 그리고 어떻든 이게 재판까지 진행돼서 1심에서 승소했다가 2심에 뒤집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쳤던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된 진상, 피해 규모 그리고 이것에 대한 후속대책까지를 강구하는 게 본격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외교부에서 이것에 대한 대응팀을 별도로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초기 단계기 때문ですよ 우선 저희들 입장을 정리하고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래서 79년이나 된 오래된 사건입니다만 당사자들에 의하면 여기에 적어도 수천 명이 폭침에 의해서 피해를 본 것으로까지 지금 추정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참사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제대로 된 진상이 규명되고 이것에 대해서 유족의 한도 풀고 또 대책이 마무리되기 위해서 좀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이용선 위원 통일부장관님,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이 5일간 여섯 차례, 이렇게 연이어 살포된 것은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연일 계속해서 살포된 데는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우선 특이점은 우리 민간단체가 공개적으로 오물풍선을 살포하지도 않았는데 한 달 만에 북한이 5회에 걸쳐서 오물풍선을 살포했다는 게 특이합니다.

○이용선 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북은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으로서 오물풍선을 보낸다 하고 또 북쪽도 표현의 자유라는 표현을 쓰면서 오물풍선을 보냈지 않습니까? 김영정부 부부장의 입장 발표에 그렇게 담겨 있던데.

그런데 지금 5일에 걸쳐서 이렇게 보낼 때는 대북전단 살포가 민간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공개적으로 일단.....

○이용선 위원 통일이부가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아니요, 공개적으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북한이 계속 우리 전단 때문에 오물풍선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제가 위원회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북한의 하나의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여러 가지 다른 의도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지금 이 오물풍선이 이번에 확인된 바로는 기폭장치인지 발열 타이머인지

이게 화재로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이용선 위원** 그래서 사실 주유소라든지 유류저장소 같은 데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대형 화재나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한 산에도 건조한 계절로 접어들게 되면 이게 대형 산불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이제는 오물풍선이라 얘기할 수 없는 오물 폭탄으로까지 이게, 즉 대형 화재나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도화선 이렇게 성격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이 대북전단과, 아까 장관께서는 대북전단만이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오물풍선을 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맞대응 전략으로 보낸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대북전단 때문에 남북 간의 안전의 문제를 넘어서서 분쟁과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발발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사안으로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통일부가 제대로 된 대응들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촉구합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이용선 위원** 그러시고, 하나센터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25개 하나센터를 일원화하려는 개편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몇 가지 이해관계 당사자나 용역 작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지금 하나재단이 세 곳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들이 이루어졌고 개별 하나센터에 있는 분들과 종사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센터의 직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거기 일하는 분들의 안정적인 신분 보장이라든지 그분들의 근무조건이 더 개선·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용선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 당사자인 하나센터 그리고 지자체, 지자체의 협력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양쪽의 견해들을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센터들의 활동이 매우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소위 하나재단 중심으로 일원화됐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 과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나 과정들을 충실하게 거치면서 잘 진행되도록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이제 이 사항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 통일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 접촉하거나 간접적으로도 접촉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수해 지원을 제의해 둔 게 있고 또 민간단체가 수해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열 곳으로 하여금 북한과 접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지금 한 건이라도 접촉이 성사된 경우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확인……

○김태호 위원 국제기구에서 북한의 엄청난 홍수 피해에 대한 지원의 뜻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북이 아직까지 거부하기보다는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김태호 위원 지금 우리가 직접은 아니더라도 이런 국제기구를 통해서 어떤 형태든 인도적 지원을 위한 노력은 저는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김태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좀 전에 김기웅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마는 북중·북러 간의 관계가, 북중 간의 관계가 좀 소원해진 것 아니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그 근거가 뭐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중·러 관계라고 하는 것이 냉전 당시처럼 하나의 견고한 블록을 형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김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현상적으로 볼 때 북중 간의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호 위원 저는 어떤 형태든지 주변 상황들을 안테나를 높게 세워서 예측하면서도 어떤 형태든 작은 것이라도 북한과 접촉의 노력을, 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된다. 그걸 놓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김태호 위원 외교부장관,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곧 이루어지고 오늘 아마 해리스-트럼프 간의……

○외교부장관 조태열 디베이트……

○김태호 위원 양자 디베이트도 있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김태호 위원 토론회도 있는데, 지금 상당히 예측 불허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어떻게 처하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되었든 동북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이런 부분은 대비

해야 된다, 예측되는 부분의 핫이슈가 된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역시 북한 핵 문제하고 주한미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과거의 1기 행정부 때 했던 대북정책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고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언급했던 그런 내용들 또 방위비 협상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똑같은 기조로 갈 것인지 그거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어떻게든 일단은 건드리기는 할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저희들이 동향도 파악하고 인맥을 통해서 관찰도 하고 또 필요한 메시지도 전달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대개 동맹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면 서로의 아픈 부분을 또 서로 배려하고 고려하고 참고해 주는 게 우리 보통 일반적인 정서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김태호 위원** 그런데 지금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동맹에 관계없이 특히 경제 문제 또 해리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미중 간의 무역전쟁 시즌2가 지금 예고되고 있고 우리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압박이 있을 것이다. 특히 양자컴퓨터, AI, 반도체 등 그런 고급기술에 대한 통제에 어떤 동참을 강하게 요구할 텐데 이런 강한 대중국 규제의 요구에 대해서,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나 전략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외교부장관 조태열**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을 위해서 취했던 경제정책은 중국을 좁은 마당, 높은 담장에 가둬 놓겠다라는 그런 기본 전략하에서 모든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고 그것은 특히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스테이빌라이징(destabilizing)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첨단기술에 관련된 핵심 분야에서 미중 전략 경쟁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큰 틀 속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업과 업계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이미 중국과 우리의 경제 생태계—한중일 마찬가지입니다—엄청나게 한 마당에 얹히고설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우리의 경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규제 부분을, 규제 동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규제 유예의 어떤 요구를 포함한 전략적 뒷받침이 저는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실제 외교적 역량을 동원해서 미국 조야에, 정계에 이해를 구하는 베이스캠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런 노력을 계속 해 왔고요. 대통령실의 안보실에 경제안보 담당하는 3차장을 신설한 것도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고 안보와 경제 문제를 함께 연계해서 검토하는 그런 핵심 기관으로 신설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이제는 외교가 국방이고, 안보가 경제고 과학입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래서 이 외교적 역량이 결국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진짜 막중한 위치에 있고 그런 걸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도 양자·다자 차원에서 각종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지호 위원 외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은 어제 인공지능의 군사적 위험에 대한 고위급회의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은 많이 좀 기다렸었지요, 대정부질문에 안 오셔 가지고.

저는 예전에 AI를 연구한 학자이자 정치인으로서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AI를 어떻게 공공의료시스템에 넣을 수 있을까에 대한 국제회의를 주관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폭발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AI의 힘을 연구자로서 한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AI를 필수의료체계에 결합하면 이 지구의 사람들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겠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차지호 위원 그런데 반대로 이제 지금은 AI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회의를 주관하셨습니다. AI의 사람을 살리는 기능에 대한 논의가 아니고 AI에 사람을 죽이는 기능을 더 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염려가 됩니다. 이게 폭발적으로 진화하는 AI 기술의 통제 가능성이 과연 있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을 장착한 치명적 자율무기를 우리는 살인무기, 로봇이라고 부르지요. 이런 형태의 군사 무기로 한 새로운 형태의 군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통제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이런 치명적 무기가 자율성을 가졌을 때 인간의 개입 없이 목표물을 선택하고 공격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려되는 상황은 사실 굉장히 비대칭적인 대량살상무기가 돼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AI 기술은 현재 완전한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그것도 민간기업이 이 기술들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일종의 팔로워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방부장관이었으면 제가 굉장히 치열하게 말씀을 드렸을 건데 외교부와 외교부장관은 군사적 충돌보다 평화로운 외교 수단을 통한 어떤 국제질서들을 조정하는 데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 외교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AI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위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굉장히 파괴력이 클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 속도와 이런 규범적인 측면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 큰 갭이 있는데 빨리 액션을 통해서 그 갭을 줄여 가야 되겠다는 게 우리의 기본 목표, 의도였고요.

작년에 네덜란드와 함께 네덜란드가 주관해서 한 1차 회의에서는 콜 투 액션(Call To Action)이라 해서 액션을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번에는 블루프린트 포 액션(Blueprint For Action)이라 그래서 액션을 위한 청사진을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중차대한 시기에 어떤 규범을 설정하는 작업을 우리나라가 네덜란드와 함께 개시했다는 것, 그 이니셔티브를 취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외교·군사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차지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AI 관련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이 AI 기반의 자율무기가 핵무기보다 더 인류에 위태로운……

○**외교부장관 조태열** 가공할 만한……

○**차지호 위원** 가공할 만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핵확산방지조약(NPT)과 같은 형태로 화학무기, 생물무기를 포괄적으로 완전히 금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AI를 활용한 살상무기들을 제한할 국제법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당연히 힘을 합쳐서, 국제적으로 힘을 합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지호 위원** 그러면 외교부의 입장은 포괄적으로 AI를 활용한 살상 무기를 금지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부의 입장이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런 단정적인 것보다는 AI가 가지고 오는 큰 혜택의 측면과 그것이 또 잘못 사용됐을 때 영향을, 가공할 만한 그런 위력 그것들을 동시에 담아내는 규범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한 작업을 늦기 전에 빨리 시작을 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주도한다라는 데 외교적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차지호 위원** 그러니까 핵확산방지조약이 만들어진 거는 핵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군사적으로 통제가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차지호 위원** 그런데 AI 기술은 군사적 활용, 이렇게 사람들 죽이는 기술과 결합되기 이전에도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챗GPT를 포함한 여러 회사들에서는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이런 쪽에서도 탈퇴하고 또 이제 기술 자체를 6개월간 개발 유예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포괄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AI를 이용한 군사적 활용이 통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쉽지 않은 과제지만 아시다시피 지난 5월에는 저희가 AI 서울 summit을 주최해서 민간 분야에서 AI의 어떤 혁신적인 측면과 안전성의 측면 그리고 그걸 모두 포용성을 다루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민간 분야에서 AI 규범 설정에 관한 작업을 우리가 주도했고 이번에는 군사 분야에서 규범 설정하는 작업을 네덜란드와 함께 저희가 주도한 거기 때문에 저는 민간과 군사 분야에서 AI 활용에 관한 미래 규범을 우리가 앞장서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차지호 위원** 그런데 그 규범 내용들을 제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규범 내용이……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직은 규범이 정해졌다고 할 수 없지요.

○**차지호 위원** 블루프린트를 열심히 읽어 봤었는데요. 그런데 그 블루프린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 AI의 군사적 활용이 국제인도법의 이행을 증진할 수 있고 평화 구축과 평화 유지를 효율화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제되지 않을, 통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약한 AI가 어떻게 국제 평화에 증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주관을 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통제 중심으로 지금 담론을 이끌어 갈 거는 시기상조고요. 모든 측면을 다 아우르면서 규범 설정 작업을 하는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지호 위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지만 그 목적은 자율형 또 AI를 기반해서 대량살상무기가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외교부는 금지를 원하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희는 단정적으로 결론 짓고 담론을 주관……

○차지호 위원 그럼 활용만 하기를 원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양쪽의 측면이 다 있겠지요. 저희들이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활용해야 될 군사기술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한도를 설정하겠다는 그런 문제가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차지호 위원 그럼 핵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와 AI에 관련된 위협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 결론이 핵확산금지과 같은 조약으로 나올지 아니면 양쪽을 다 아우르는 좀 더 균형적인 결론이 날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지요.

○차지호 위원 저는 사실 좀 위태롭습니다.

AI 기술 자체도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나 다른 적대적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룹들이 인공지능을 책임성 있게 군사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면 그게 괜찮을지, 통제가 가능할지. 아니, 이 기술 자체를 우리가 통제…… 국제인도법 이행을 증진한다고 인정하는 규범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거를 통제할 수 있을지……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데 이번 회의의 주된 목적이 있고요. 모든 참여국들 그리고 전문가와 학자들이 대성공이라고 평가를 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확보한 이런 평판을 기초로 저희의 주도적인 노력을 더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지호 위원 장관님, 그 기술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높여 주시고 대성공이라고 말한 학자들 말고, 그분들은 굉장히 일부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AI 기술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고 이 문제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그룹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규범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건입니다.

PPT 좀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역사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불행했던 것은 약 400년 전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7년간과 금세기초 식민지배 35년간입니다. 이렇게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건지 장관님, 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역대 대통령 중의 한 분이 말씀하신

걸로 생각됩니다.

○**김건 위원** 이게 98년 10월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본 국회에서 하신 연설 내용입니다.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 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누가 한 말씀인지……

○**외교부장관 조태열** 윤 대통령님이……

○**김건 위원** 예,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일관계 개선을 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방문 이전에 일본을 먼저 방문한다든가 한일 신어업협정이라든가 문화 개방이라든가 그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내에서는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친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매국노라는 얘기가 나오고 독도를 팔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일본하고의 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했던 것은 친일이어서가 아니라 국익을 생각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공감합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우리의 국익인지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일관계 개선이 우리 국민의 삶, 우리 민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경제 성장이 있었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아는 거지만 윤석열 정부 이후에 있었던 한일관계 개선으로 지금 올해만 해도 300만의 일본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보이고 또 작년에 거의 600만에 달하는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가서 소위 말해서 엔저를 향유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우리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양국 간에……

우리 뉴진스가 동경에 가서 어마어마한 공연을 해서 인기를 얻고 우리 케이팝, K-드라마가 다시 인기를 얻고, 그래서 우리 80만 재일동포들이 어깨를 펴고 일본 사회에서 지금 잘 또 활동해 나가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국민의 삶에 대한 것이고 이것이 한일관계 개선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도 한일관계 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에 우키시마 사건에 대한 진전도 결국 한일관계의 개선이 불러온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장관님?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저는 그 개선의 밑바탕에는 신뢰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또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올해 한 300만의 일본인들이 한국을 찾습니다, 대부분 젊은이들이겠지요. 그 일본인 관광객들이 주로 가는 데가 경복궁을 당연

히 가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김건 위원 경북공을 가게 되면 명성황후가 시해된 현장에 가서 거기에 있는 입간판을 보면서 설명을 다 볼 겁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몰랐던 이런 역사가 있구나’, 결국은 이런 인식을 깨우치는 것 그다음에 600만의 우리 관광객들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일본 사람들과 만나서 우리의 역사 인식을 알려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역사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세 번째는 또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게 저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국방부장관께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비단 그 문제뿐만 아니라 좀 더 전략적인 시각에서 보면 한미일 안보협력, 한미일 협력이라는 것이 미국이 이 지역에서의 공약을 계속 지속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또한 일본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데도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같은 생각이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그리고 이 기회에 한 말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서 미국 조야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인태 지역의 여러 유사입장국 그리고 유럽, 서방진영의 제가 만난 모든 외교장관들이 양자 관계에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담 때마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윤 대통령님의 외교 결단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일관계 개선은 단순히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안보, 지역의 안보, 나아가서는 글로벌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고립주의로 인해서 이 지역으로부터 떠나가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제고 또 일본이 새로운 군국주의라든가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걸 막는 기제가 저는 한미일 안보협력이자 한미일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지금 장관으로 계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데 똑같은 생각이라고 얘기하기 힘들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일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중일 협력이라는 걸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갔다가 이 지역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견인해 나가는 것 그다음에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해 가는 것에 있어서 한중일이라는 기제가 아주 중요한데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속할 수 있는 것도 한일관계가 개선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중일 삼각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가가치 역할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장관님들 어제 오늘 고생하십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죄송합니다.

○김영배 위원 명절 잘 쇠시고요. 앞으로 하여튼 우리 외교·안보 분야를 함께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아까 권철승 위원님 질의가 잠깐 있었는데요. 이거는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가 북한에 보내는 USB장치에다가 불법적인 콘텐츠를 불법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보낸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불법을 저질러도 좋다 그거를 통일부가 조장하는 건 아니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아닙니다.

○김영배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은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 하더라도 불법을 저지르면서 좋은 일을 하도록 정부가 권장한다, 방조한다 이렇게는 안 하실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걸 못 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거는 이제 주무……

○김영배 위원 맞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김영배 위원 그러면 고발을 하셔야 되겠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 부분은 지금……

○김영배 위원 간단하니까, 고발하셔야 되겠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아니요. 그 부분은 지금 경찰에서 조사가……

○김영배 위원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 민간단체에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 보도도 봤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시면 국정감사 때 문제 됩니다. 그리고 직무유기로 공무원들이 줄줄이 다칠 거예요. 이거 나중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 부분은 우선……

○김영배 위원 몇 번을 지적했는데 안 하신다? 이거 밑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장관님도 그렇고 다치세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 부분은 우선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그걸 확인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아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 조사가……

○김영배 위원 아니, 확인하시겠냐고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 부분 가지고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 부분은 주무부처가 문체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통일 관련 단체가 북한에다가 이걸 보내잖아요. 통일부에서 지원금

도 받는 그런 민간단체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가 활동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 업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말로 직무유기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일부의 일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있지만 그 단체들이 뼈라를 뿌리는 데 통일부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렇게 되면 나중에 국정감사 때 큰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고발도 당하실 수 있어요. 책임지셔야 되기 때문에 밑의 부하직원들 지금 얼굴 표정 보십시오. 이거는 빨리 그냥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답변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도 오물풍선 잠깐 지적하셨는데요. 조선일보에 보니까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북한 오물풍선에서 나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시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김영배 위원** 피해조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그 부분은 우선 기폭장치 관련해서 합참에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안부에서 피해조사를 해서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럼 그 후속조치는 통일부에서 해야 될 테니까 나중에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여쭙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도들에 의하면 영사조력법상 우리 영사관에서 교민들의 피해나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제대로 조력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보도들 최근에 보셨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유감스럽게도 최근에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9월 2일 날 KBS 보도에 의하면 캄보디아대사관에서 감금됐다 이런 신고가 있었는데 직원이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서 그냥 신고하세요’라고 안내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거는 제가 대사관을 통해서 사실관계 보고를 받았습시다만 처음엔 그랬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직접 담당 직원이 다 신청서를 써 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시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그 보도에 의하면 새벽에 자력 탈출해 가지고 대사관 앞에 와 있다고 그러는데도 ‘8시 업무 시작 이후에 만납시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사실은 교민들이 굉장히 화를 냈다, 분노했다 이런 보도가 있고요.

또 하나가 9월 6일 날 강대불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나온 건데 베트남에서 기절 후에 깨어나서 보니까 온몸이 그냥 깨지고 부서지고 이랬는데 현장으로 갈 인력이 없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내에 와 가지고 이분이 심각한 뇌진탕, 치아 골절 이런 걸로 묻지 마 폭행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영상 마지막에 대사관은 진짜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이런 영상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고 그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앞으로 우리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는데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하여간 그런 일들이 근거 없이 일어난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더

재외국민 보호 강화조치를 취하도록 저희가 이미 조치를 했고요. 관련 매뉴얼들도 개선을 시킬 생각입니다만, 저도 재외공관 근무를 해서 영사를 해 봤습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고를 당하는데 그중에 일부만 가지고 자꾸 부각이 되니까 99% 우리 공관의 직원들이 하는 그런 활동들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김영배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좋은 사례도 적극적으로 보도되도록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외교부장관 조태열** 하는데 그런 거는 보도가 안 됩니다.

○**김영배 위원**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원래 공직자가 그런 거잖아요. 공직이라는 게 우리가 자부심을 먹고 살고, 그렇지요? 국가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애국심으로 사는 게 공직자의 숙명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고.

그러나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관님 말씀대로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왔다 갔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도광산 문제는 일단락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외교부에서는 7월 달에 보도자료를 내면서 앞으로도 계속 협상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말이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전시물 개선에 관한 부분은 협상이 계속돼야 될 문제고 등재와 관련된 협상은 일단락된 것이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대통령실에서는 사도광산 관련되어서 전시를 포함해서 다 이게 일단락됐다 이런 입장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니까? 정부 공식 입장은 그러면 앞으로도……

○**외교부장관 조태열** 합의사항이 앞으로도 계속 개선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김영배 위원** 그러면 강제 그다음에 조선반도 노동자 그런 문제는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글썄, 그것은 합의된 문안이기 때문에 전시물의 내용을 얼마나 업그레이드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협상을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다음에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주질의 순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35분이 지났습니다마는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세 분 계십니까? 그러면 세 분 추가질의 3분씩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철승 위원님부터 세 분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승 위원** 권철승입니다.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하고 좋은 관계를 해서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걸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을까?

실제로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 과거사 문제를 제외하고는 일본과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국제적으로도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권철승 위원 그런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 사실 정경분리가 안 되면서 그때부터 상당히 좀 다른 국면으로 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김대중 정권 때 오부치 선언 같이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선언문에 보면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 이렇게 선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주어와 술어 부분만 떼 보면 ‘일본이 사죄를 하였다’입니다. 주어도 일본이고, 지금은 전부 주어가 개인이잖아요. 기시다 총리도 와서 그냥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 내각의, 정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권철승 위원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 게……

○외교부장관 조태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고……

○권철승 위원 그런데 그 계승이 제가 말씀드렸다고 고노 담화 같은 데는 종군 위안부가 있는데 그것을 각의 결정으로 공식적으로 바꿔 버렸잖아요, 아주 결정적인 내용들을.

그래서 계승을 했다면 가장 최근의 결정을 계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종군위안부에 종군이 빠진 게 왜 그렇게 결정적인 변경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권철승 위원 결정적인 것이지요. 종군위안부가 없다고 하면 일본군 위안부가 없는 거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니요, 위안부가 일본군 위안부고 저희들은 일본군 위안부라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지요. 그런데 저기는 그렇게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합의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외교부에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는 힘들겠지만 한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합의문에 대한 성격이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지. 그렇게 좀 고민해 보셔야 될 대목 아닌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외교부와 제가 누구보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리고 이 합의문에 대한 법적인 성격과 그대로 연결돼 있는 게 21년, 23년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입니다. 손해배상을 인정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 입장 변화를 한 것도 있고 또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이니까 정부로서는 당연히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외교부장관 조태열 일본이요? 우리가요?

○권철승 위원 우리나라 정부가.

○외교부장관 조태열 당연하지요. 일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본에까지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강요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에 당연히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당연합니다.

○권철승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외교부장관님,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에 대해서 하나 또 확인하려고 합니다.

동료 위원 질의하실 때 답변을 장관께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정부로서는 당연히 명부를 받은 후에 필요한 검토를 거쳐서 이분들이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도록 모색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윤후덕 위원 이걸 분명한 의지고 또 판단이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윤후덕 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에 관한 지원위원회에 재심의를 하면 명예도 회복하고 보상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저는 그걸 염두에 두고 답변드린 겁니다.

○윤후덕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활동을 하고 이제 종료가 됐어요.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게 활동할 때는 우키시마호 승선을 했던 명부가 없기 때문에 각하가 돼 버린 거예요. 이 각하라는 게 뭡니까? 원고 적격이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각하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명부가 확인이 되면 원고가 적격한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윤후덕 위원 그런데 그게 확인이 되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드디어?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윤후덕 위원 조금씩 조금씩 실제 희생을 당한 사람 그리고 거기서 생존한 사람 그리고 또 그 유가족이, 이제 이 승선했던 명부가 확인되면 앞으로 외교부가 그렇게 노력해주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행안부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외교부가 노력하고 또 행안부가 노력해서 본인들이 ‘이분이 맞는 분입니다’ 하면 재심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행정안전부가 계승해서 그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것은 후속 조치만 하고 있어요. 이게 신청을 할 수……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래서 지금도 그 명부가, 행안부에서 지금 명부를 검토하고 있고요. 명단을 보는데 중복된, 16건의 자료 중에 중복된 사람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된 모든 것은 행안부에서 주무 부처로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이제 확인이 되면 재심의, 재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은 행안부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좀 확인해 보고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요, 위원회가 없어서 재심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을……

○**외교부장관 조태열** 위원회는 없어졌지만 그것을 행안부가 계승했는데 어떤 형태로 계승해서 법적 지위가 어떤 것인지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명부도 당장 못 드리는 것이 중복된 게 없는지, 80년 전에 작성된 자료여서 방대한 분량이라서 그것들을 행안부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방금 제가 실무자로부터 들은 답변입니다.

○**윤후덕 위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너무 중요해요. 본인들은 너무너무 애타고 있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당연하지요.

○**윤후덕 위원** 이것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는 김준형 위원님.

○**김준형 위원** 장관님, 어제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대정부질문에서. 니가타 총영사가 저의 명예를 굉장히 훼손시켰는데요. 제가 가서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이 그래도 낫다는 말을 했다는 왜곡을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받으셨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낫다가 아니라 장소 이전 문제보다는 전시물의 내용을 보다 완전하게 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김준형 위원** 어제 얘기하고 조금 다르신데요. 제가 정말……

○**외교부장관 조태열** 키타리움 사도는……

○**김준형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잘못된 보고냐 하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키타리움이 있고 아이카와가 있고 갠도 박물관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변한 것은, 키타리움도 너무 왜곡이 심해서 그리고 사람도 세 박물관 중에 가장 많이 가는 곳이 갠도입니다. 그래서 아이카와의 내용도 바뀌어야 되지만 갠도 박물관이 가장 낫다고 했는데 제가 키타리움으로……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이카와를 잘했다고,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장관님께 증거까지 보여주면서 아이카와가 얼마나 사람이 안 가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왜곡된 보고를, 저는 사과를 받기를 원하고요. 그분이, 대질신문하고 싶으면 국감 때 니가타 총영사 출석시켜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제가 대응하겠습니다.

○**김준형 위원** 잘못된 보고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입각해서……

○**김준형 위원** 다시 확인하십시오.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지금 다른 의원실이나 언론에서 확인이 오고 있거든요. 저는 전혀 그런 말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통일부장관님, 계속 통화 내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통화는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일지도 횡수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통화 내용은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왜 비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단체는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실무자도 먼저 건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그 전화는 도대체 무슨 전화입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위원님, 그것은 그 언론 보도가 있었고 그 언론 보도는 아마 저는 거기에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분명히 통일부에서 실무자들이 우선으로 소통을 유지하고 있고 또 추석이 지나고 나면 실무자들이 접경지역의 주민들과도 면담을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준형 위원** 장관님도 8월 13일 날 오셔 가지고 하겠다고 하셨으면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국감 10월 달까지 한 번이라도 만나실 용의가 있습니까? 약속하십시오. 만나겠다고 하셨어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제가 직접 만난다기보다는 우리 실무진에서 계속 소통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준형 위원** 계속 말을 바꾸시네요.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추가질의 다 끝났습니다마는 현안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추가질의하실 겁니까?

윤후덕 위원님.

○**윤후덕 위원** 외교부장관님,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유족이나 생존자가 계신 분이 명부가 확인이 되면 신청할 수 있고 또 재심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파악해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여기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면 그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별법이었던 거거든요. 특별법을 이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해요, 저는. 그래서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든 특별법을 만들려고 한다면 외교부장관으로서는, 정부로서는 동의를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태영호 이런 분이네요. 그런데 책을 낸 게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그 책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외 공관에 다 뿌린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언론에 인터뷰를 하시고. 그 사건 아세요? 이건 진짜 사건이네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런데 아직까지 그 서적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또 선정위원회도 아직까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하나의 예시로서 태영호 의원의 책 그다음에 다른 또 탈북자분의 영어책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도록……

○**윤후덕 위원** 예시로 할 뿐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무처장이 간단한 자리가 아니지요. 이걸 예시로 하고 신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금년에도 없었고 작년에도 없었고 내년에 신규 예산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저도 책을 내 보고 출판사도 해 보고 장관님도 출판사 해 봤잖아요. 아니, 이것은 아주 공정하게 위원회에서 선택을 하고 그래서 정하는 거지, 예산을 투입하는 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특정인의 자기 책을 예산을 막 편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통일부에 의해서 편성이 돼서 국회에 들어왔더라고요, 국회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일단 실무진에서 그 예시를 들면서 태영호 처장 책만 이야기하게 아니고 다른 또 탈북자들의 영어책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우려를 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게 예시를 한 것은 태영호의 책 하나하고 2개가 예시됐어요. 그게 압력이자, 압력.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만 줘요.

이 사무처장이라는 게 그전에는 장관급이었고 지금은 차관급인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윤후덕 위원** 그렇지요.

민주평통의 위원장님이 대통령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윤후덕 위원** 헌법기관 아닙니까, 헌법기관. 헌법기관의 사무처장이 자기 책 가지고 내년 신규 예산을 아예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한다고 하는 거예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정성에……

○**윤후덕 위원** 통일부장관이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이건 잘못된 일이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신규 예산이에요, 신규 예산. 요즘 건축재정 한다며요? 이 신규 예산 2억 6000만 원이에요. 장관 스스로 삭제하십시오. 삭감하십시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지호 위원님 혹시……

○**차지호 위원** 잠시만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입니다.

○**차지호 위원** 아까 마이크가 꺼져서 외교부장관께 또 질문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AI의 군사적 이용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핵이나 화학무기, 생물학적 무기처럼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대량살상무기가 금지된 것은 당연히 인류에 대한 해악과 통제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류에 대한 해악…… AI 기술, 앞으로 일반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그 부분이

무기화됐을 때 인류에 미치는 해악과 그 통제에 어려움은 기존에 있는 다른 대량살상무기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상과학영화에서 보는 터미네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기술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게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고위급회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고위급회의가 그 포문을 여는 회의로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블루프린트 포 액션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저는 아무리 읽어 봐도 군사적 목적에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혜택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제해야 된다는 말, 잘 통제하면 된다는 말로밖에 안 읽혀요. 그런데 이게 통제 가능성도 굉장히 약한 데다가 인류에 미치는 해악도 굉장히 큰데 처음에 만들어지는 블루프린트의 이 방향성들이 군사적 활용을 허용하는 방식 그리고 혜택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쓰여 있다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대한민국, AI 기술들이 앞으로 굉장히 발달해서 여기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국가에서 이 군사적 이용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실 때는 부디, 저는 아주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외교부장관 조태열 통제 쪽에……

○차지호 위원 포괄적 금지를 향하게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조태열 유념하겠습니다.

○차지호 위원 해악이 너무 큼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외교부 및 통일부 등 소관 부처에 대한 현안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에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부와 통일부 등 관련기관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님, 김영호 통일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출석 위원(21인)

권칠승 김 건 김기웅 김기현 김석기 김영배 김준형 김태호 안철수 위성락
윤상현 윤후덕 이용선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인요한 조정식 차지호 한정애
홍기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전문위원 김사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장관 조태열

기획조정실장 배종인

조정기획관 송시진

아시아태평양국장 김상훈

영사안전국장 윤주석

공공문화외교국장 서빈

한국국제협력단

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통일부

장관 김영호

기획조정실장 오대석

통일정책실장 김병대

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정보분석국장 김상국

통일협력국장 황태희

남북관계관리단

단장 강연서

국립통일교육원

원장 고영환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2024. 8. 30. 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0)

9월 2일 회부됨

2025년도 예산안

(2024. 9. 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1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 9. 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0)

이상 2건 9월 3일 회부됨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3.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3.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1)

이상 2건 9월 4일 회부됨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4.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3)

9월 5일 회부됨

○계획서 송부**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4. 9. 2. 정부 제출)

2024년 재정 관련 자료

(2024. 9. 2. 기획재정부 제출)

이상 2건 9월 3일 송부됨

○보고서 송부**2023년도 고려인동포 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비공개)**

(2024. 8. 27. 재외동포청 제출)

2024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

(2024. 8. 30. 통일부 제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2024. 8. 30. 기획재정부 제출)

2024년 공공외교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에 관한 보고서

(2024. 8. 30. 정부 제출)

이상 4건 9월 2일 송부됨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2024. 9. 2. 기획재정부 제출)

9월 3일 송부됨

○진정서 송부**미얀마 군부의 잔혹한 전쟁범죄 규탄 및 피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촉구 결의안**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참고자료로 송부됨

○보고서 제출**2024년도 국제기구 부담금 종합보고서**

(2024. 8. 31. 외교부 제출)